

## “심사평가위원 조사 가능” 경찰 추가 혐의 포착 수사 확대

### 평창조직위 입찰 비리 의혹

속보=평창올림픽플라자, 강릉올림픽파크 임시시설물 대행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사건(본보 5월27·29·30일자 5면, 5월31일·6월1·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기존에 드러난 입찰 정보 누설 혐의 외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정보 누설 혐의 외에도 수사 중인 혐의가 여럿 있

다”며 “심사평가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평창조직위 국장급 간부 A씨가 입찰 이전에 발주 사업 정보를 특정업체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본보 보도를 통해 해당 입찰 과정에서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심사평가위원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로 A

씨의 경찰 출석소사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 4월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체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부정 발급한 혐의로 전 기술보증기금 직원, 브로커, 중소기업체 대표 등이 구속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브로커와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출 사기범행을 벌인 사건의 증거를 분석 과정에서 A씨의 올림픽플라자 입찰 관련 의혹이 포착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등 증거 분석은 끝났으며 참고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정운호기자

### / 닷 올린 동남아시아 수출 공략 /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진진) 회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6일 베트남 하노이의 생산기지 우수 운영업체인 크루 설비를 방문하고, 현지 기업인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 지역상품 판촉·친선 촉구 親 강원도 이미지 쌓는다

### (3·完) 베트남 토털 마케팅, 어떻게 진행되나

도가 이번 주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하는 토털 마케팅 ‘강원의 날’ 행사는 역대 통상, 국제교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동안 관(官)이 주도해 왔던 것으로 주최·주관하는 패턴을 벗어나 민간이 대규모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제인 대거 참가 B2B(기업 간 거래) 추진=베트남 토털 마케팅 교류단의 인원은 150여명으로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 외에도 경제단체장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 베트남 사업을 추진 중

업 단독 주최·주관 벗어나

민간 대규모 참여해 눈길

경제사절단·강국회 등 참가

인 기업인들의 모임인 시장개척단, 지난해 GTI박람회 우수기업들과 민간 경제계에서 50여명이 참가한다. 경제사절단은 6일부터 하노이에서 산업시찰을 시작했고, 시장개척단과 GTI박람회 우수업체들은 7일부터 현지에서 바이어상담회, 강원상품 판촉전을 추진하며 B2B(기업 간 거래) 성사에 나선다. 이미 5개 이상의 업체가 베트남 업체와 MOU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무역인재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강원대 학생 17명도 기업 간 교류현장을 보조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도는 베트남 유학생 유치까지 내다보고 있다.

■스포츠투 매개 ‘친(親)강원도’ 이미지 구축=이번 토털 마케팅

팅의 하이라이트는 9일 오후 호찌민 통낫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 FC와 호찌민 선발팀 간의 친선경기다.

베트남의 스타급 선수인 강원 FC 썬영 선수 팬사인회를 내세워 대규모 관심을 모으고, 이들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 강원도 기업·상품 마케팅을 진행한다.

특히 이 경기는 호찌민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원FC 서포터즈인 나르샤도 이날 친선경기에 참가해 한국 특유의 응원문화를 선보인다.

전홍진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토털 마케팅을 통해 경제계 민간과 민간의 교류,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강원도, 평창올림픽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도록 하겠다”며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를 시작으로 동남아로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건설기업 체감경기 올 최고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오른 86.6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다.

발주물량 증가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CBSI는 전월과 같은 100.0을 기록했으며, 중견기업은 12.9포인트 상승한 87.1로 나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70.2로 전월보다 6.9포인트 떨어졌다. 이달 CBSI 전망치는 0.9포인트 오른 70.2로 예상됐다. 하위윤기자

조합원에 감동주는 행복 나눔 신협

전원주택대출

1번지

봄내신협

감정가액 70% 전원주택 대출 환영

후평동 포스코 아파트 후문앞

문의 ☎ 033)242-5300



# 부실시공 주범 ‘최저가낙찰제’ 부활法 논란



덤핑 입찰과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부·민간이 수년간 개선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부활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건설시장에서 지난해 퇴출된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부실시공 사건 때마다 다원죄로 지목돼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격낙찰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한 국가계약법 제10조 3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는 지난해 1월 공공공사의 낙찰자

## 정동영,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재도입”

결정방식에서 자취를 감춘 최저가낙찰제의 부활을 뜻한다.

정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 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사전에 엄격하게 평가해 계약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적격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최저가낙찰제 대신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명칭만 바꿨을 뿐 경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또 다른 ‘운찰제’”라며 “PQ 심사를 거친 입찰에 또다시 세부공종의 가격을 이리저리 심사해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했다.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시공권을 갖는 최저가낙찰제는 담합을 조장하고 무리한 비용 축소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과거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의 폐단을 깨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지 2년도 안돼 최저가 부활 입법이 나온 것 자체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입찰제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 부활법이 가격 위주의 낙찰제를 폐기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20

여년 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했지만 적정 공사비를 둘러싼 수백여건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은 뒤 최고가낙찰제 등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은 1990년대 증반부터 가격 외에도 품질과 기술력,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 운영비 등을 두루 평가하는 가치 중심의 최고가낙찰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저가낙찰 방식의 폐단을 경험한 뒤 이를 없앴다. 대신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추진법을 만들어 저입찰 가격조사제도, 최저 제한가격제도 등을 통해 저가투찰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미국 역시 199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싼 값에 공사를 낙찰받으면 원가를 아끼려다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최저가낙찰제의 재도입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